



위성에서 본 김일성 광장 열병식 북한이 지난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한 열병식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 열병식에 동원된 평양주민들이 '영광'이란 글씨를 만든 가운데 군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 왼쪽 아래의 기와지붕 건물이 인민문화궁전이고 그 앞의 하얀 지붕이 주석단, 열병식이 열리고 있는 곳이 김일성 광장이다. [AP=연합뉴스]

최재천, 외상센터 비아냥 ... 이국종 격분

(민주당 당선인)

현장에서

25일 이른 아침이었다.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아주대 의대 중증 외상전문의 이국종(43) 교수였다. 그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럴 수 있느냐. 민주당이 나서서 법안을 만들었는데..."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과속차량 과태료의 20%(1600억원)를 2017년까지 사용해 16개의 중증외상센터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 정쟁에 희생돼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그를 화나게 만든 건 민주당합당 최재천 국회의원 당선인의 트윗이었다. 최 당선인은 24일 저녁 트위터에 언론에 보도된 이 교수의 발언을 인용했다. "석해군 선장이 치료받을 때는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찾아와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 나 몰라라 한다"는 이 교수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건 정부에 물어봐야죠"라고 썼다. 중증외상센터에 차질이 생긴 책임을 정부한테 돌린 것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2월 법사위로 이송돼 먼지만 쌓이고 있고 우선 처리 논의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교수는 "국회가 할 일을 안 한 건데. (최 당선인이) 비아냥거리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최 당선인은 "외상센터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권한과 책임 조정 미비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뜻"이라고 해명했

다. "실제 그런 사정 때문인지 알아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 당선인은 "알아보나마나"라며 "17대 국회 법사위 간사 경험에 비춰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권한 조정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교수의 분노는 비단 최 당선인만이 대상이 아니다. 외상센터 지원을 약속한 여야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 특히 2008년 중증외상센터 발동을 걸었고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에는 섭섭함이 크다. 이 교수는 "18대 국회 회기가 남았는데 의원들이 왜 출근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념 법안'이 아니다. 생명을 구하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는 응급처방이 필요하다. 과속 과태료를 계속 갖다 쓰기로 하고 중증외상센터를 추진하고, 국회(19대)는 개인하자마자 법안 발의와 처리를 신속히 하던 된다. 그래야 해마다 외상센터가 없어 숨지는 1만 명을 살릴 수 있다.

ssshin@joongang.co.kr



신성식
선임기자

몸싸움 방지법 5월 처리 가능성

황우여 절충안, 민주당서 수용

여야가 '몸싸움 방지법(국회선진화법)'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 25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마련하고, 민주당합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하면서다. 여야 모두 '이 법의 처리가 막히는 바람에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모두 폐기처분되고 만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다만 이 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용할지 마지막 관문으로 남은 상황이다.

황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무산된 24일 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절충안을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법안이 장기간

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이 15명일 경우에 여야 비율이 8대 7인데, 5분의 3을 채우려면 9대 6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안을 받은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중진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문성근 대표권한대행, 김 원내대표, 노영민 수석부대표와 함께 당내에서 '몸싸움 방지법'을 적극 추진했던 박병석·박상천·원혜영·이미경 의원 등 10여 명이 모였다.

처음엔 "우리도 추가 제안을 덧붙인 억제안을 해야 한다"며 강경기조가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박상천 의원이 "국민들이 보기에 복잡하기만 하지 또 한번 제안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하자"고 말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원혜영 의원도 "솔로몬 재판장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다"고 말했다.

마침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충북도당에서 열린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 후 기자들에게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꼭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제 황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안을 받아들여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는 법안 처리 절차를 합의 의할 예정이다. 5월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법'이 민생법안과 함께 일괄처리될 가능성에 여야가 한발짝 다가간 셈이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장기 계류 법안 본회의 상정 요건

간사 합의나 상임위 60% 찬성으로

계류될 경우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주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장기간(12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사 합의와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때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의 과반 찬성을 얻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 합의 또는 상임위원 5분의 3의 찬성"이란 요건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라도 상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황 원내대표 측이 우려했던 '식물국회'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새누리당 고

브리핑

미 NBC방송 "북한 2주 안에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고, 북한은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NBC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은 북측의 미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2주 안에 세 번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100%"라며 "인민군 창건 80주년인 25일 이후라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또 북한은 이미 12기에서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로이터 통신도 24일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쳤고, 조만간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내 북한 벌목공 8명 한국으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일하던 북한 벌목공 8명이 지난 11일과 13일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국내로 들어왔다. 모처에서 한국행을 대기 중인 탈북자들도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러시아의 경우 유엔난민기구(UNHCR) 모스크바 사무소의 역할이 정립돼 있고 탈북자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한국으로 오는 절차가 비교적 잘 잡혀 있다"며 "탈북자들의 한국행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와도 협조가 원활하다"고 말했다.



"감사의 달 시은품 증정"
5월 가정의 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잭니클라우스 제품을 50만원 이상 구매하신 모든 고객님의 고급 라운드 티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
기간: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은품은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www.jacknicklaus.co.kr | 코오롱 고객센터 1588-7667



감사의 달 선물제안 2